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2022. 8. 24.

목 차

- I.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 II. 노후소득 조달방법에 따른 OECD 국가 분류
- III. 국민연금의 문제점
- IV. 공적연금 개혁의 세계적 추세
- V.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역할의 조정

I.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 인구 환경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

- 신생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년에 26만 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81로 역대 최저 기록
- 평균 기대여명은 2060년에 90.1세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은 43.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노인부양률 급증 예상(통계청 홈페이지)

□ 경제 환경의 악화

-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기업의 혁신 활동과 투자 부진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30년대에 1.3%, 2040년대에 0.8%, 2050년대에 0.5%의 경제성장률 예측
(기획재정부 2020, p.4)
- * 0%대의 경제성장률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대와 동일한 경제성장률
- 성장 둔화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이는 다시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를 통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 초래

I.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 미래에 복지 지출 급증

- 국민연금제도의 늦은 도입(1988년)과 낮은 노인 인구 비중으로 사회복지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현재 낮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보건 지출은 향후 급증하여 2060년부터 EU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표 1> 참조)
- 이의 주된 원인은 고령화와 성장 둔화

<표 1> 한국과 EU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과 공공보건의 GDP 대비 비중 (단위: %)

		2019	2030	2040	2050	2060
한국	연금, 보건	12.2	5.3(7.1)	7.3(9.7)	9.3(12.2)	11.2(13.6)
독일	연금, 보건	10.3(9.0)	11.6(9.2)	12.0(9.5)	12.2(9.8)	12.5(9.7)
프랑스	연금, 보건	14.8(10.3)	15.8(11.1)	15.2(11.7)	14.3(12.0)	13.4(12.2)
덴마크	연금, 보건	9.3(10.2)	8.5(11.7)	8.1(12.9)	7.6(13.6)	7.2(14.2)
네덜란드	연금, 보건	6.8(9.4)	8.1(10.5)	9.1(11.7)	8.9(12.4)	8.9(12.7)
스웨덴	연금, 보건	7.6(10.5)	7.4(11.3)	7.0(11.9)	7.0(12.3)	7.4(13.0)
EU 평균	연금, 보건	11.6(8.3)	12.5(8.9)	12.8(9.5)	12.6(10.0)	12.1(10.2)

주: 1) 2019년은 실측치이며, 한국은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합계임.

2) 보건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합계임.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19), OECD Statistics 홈페이지 및 European Commission(2021)

II. 노후소득 조달방법에 따른 OECD 국가 분류

□ OECD 국가의 노후소득 수준

- 2016년 기준 전체 인구 평균소득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은 87.4%(OECD 2019, p.185)

* 프랑스(103.2%), 이스라엘(101.2%) 및 룩셈부르크(105.3%)는 전체 평균을 상회

* 그리스(96.8%), 이탈리아(99.6%), 포르투갈(99.0%) 및 스페인(95.3%) 같은 지중해 국가도 매우 높음

* 전형적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하는 미국(93.8%) 및 영국(83.8%)과 비교하여 전형적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85.5%)도 비슷한 수준임

*이는 선진국의 노후소득 수준이 복지제도 구축방법에 관계없이 비슷한 것을 보여줌(Esping-Andersen 외 2016, p.842)

□ 노후소득 조달방법에 기초한 OECD 국가 분류

- 자본소득(주로 민영연금) 비중에 기초해서 분류

- 첫째, 자본소득(주로 민영연금) 비중이 평균(10.0%)보다 2배 이상 높은 국가 그룹으로 캐나다(42.4%), 뉴질랜드(26.8%), 덴마크(22.2%) 및 한국(22.5%)이 이에 해당

* 이들 국가에서 공공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하인데, 이는 공적연금 역할이 미흡함을 의미

*이 그룹에서 특이하게 한국의 경우 근로소득이 41.3%를 차지하는 반면 공공이전소득은 25.0%에 불과한데, 이는 국민연금 도입이 늦고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

II. 노후소득 조달방법에 따른 OECD 국가 분류

- 둘째, 이와 반대로 자본소득 비중이 평균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국가 그룹으로 라트비아(1.7%), 리투아니아(3.2%), 에스토니아(2.1%), 슬로바키아(0.7%), 폴란드 (0.8%), 슬로베니아(4.0%), 체코(2.6%) 및 헝가리(1.3%)가 이에 해당

* 이 그룹은 1991년 소련 붕괴 후 명령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국가로 공적연금을 칠레 모델에 따라 민영화

* 기업연금에 의한 노후소득이 전혀 없고 공공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는 데, 높은 공공이전지출이 이들 국가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

- 셋째, 자본소득 비중이 5-10% 수준으로 민영연금 역할이 제한적이면서 공적연금이 관대한 국가 그룹으로 그리스(5.0%), 포르투갈(5.8%), 이탈리아(5.9%) 및 스페인(8.3)이 이에 해당

* 관대한 공적연금이 노후소득에서 주된 역할(70% 이상)을 하면서 노후소득이 전체 인구 평균소득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PIGS 국가

* GDP에서 차지하는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2015년 기준 매우 높아(그리스 16.8%, 포르투갈 13.3%, 이탈리아 16.2% 및 스페인 11.1%)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2010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국가재정 위기를 초래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

II. 노후소득 조달방법에 따른 OECD 국가 분류

- 넷째, 민영연금 역할이 5-10% 수준으로 제한적이고 국민소득 수준이 높으면서 노후소득을 주로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국가 그룹으로 독일(10.0%), 아일랜드 (5.5%), 오스트리아(5.6%), 핀란드(8.5%), 룩셈부르크(9.1%) 및 벨기에(6.0%)가 이에 해당

* 이들 국가에서는 자본시장 발전이 늦어 연금기금의 자본시장 투자가 어려웠고, 최근에서야 사적연금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프랑스는 이 그룹에 속한 여타 국가들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소득 비중이 16.0%로 다소 높음

- 다섯째, 자본소득 비중이 10%를 초과하면서 공공이전소득 비중이 50% 이하인 그룹으로 미국, 영국 및 일본이 이에 해당하며, 경제 운영에 시장경제 특성이 강한 국가들

* 미국과 영국에서는 노후소득 조달에서 개인책임과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고,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민영보험 상품을 구입하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잘 구축된 자본시장이 사적연금시장 발전에 기여

* 일본과 미국에서는 근로소득이 노후소득에 중요

II. 노후소득 조달방법에 따른 OECD 국가 분류

- 여섯째, 공적연금 민영화로 법정개인연금이 발달한 국가 그룹으로 칠레와 멕시코가 이에 해당하며, 공적연금 역할이 미흡하고 근로소득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음
 - * 칠레는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체제전환 국가의 모델이 되었음
 - * 멕시코는 공공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낮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일곱째, 터키는 기업연금과 자본소득의 합(53.0%)이 가장 높은 반면 공공이전소득이 매우 낮은 점에서 특이한 경우
 - * 노인들은 주로 민영부문을 이용해 노후소득을 조달하고 공적연금 역할이 매우 미흡

II. 노후소득 조달방법에 따른 OECD 국가 분류

- 여덟째, 법정 또는 준법정 기업연금을 적용하는 국가로 네덜란드,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에 해당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 전통적으로 사회적 연대가 미덕으로 간주되지만 공적연금 역할이 독일과 프랑스 같은 비스마르크형 복지국가보다 현저히 적은 대신 준 법정 산업별 기업연금을 적용

*스위스에서는 2018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의 73.6%가 법정기업연금에 가입

- OECD 국가들은 자국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 노후소득 보장에 공적연금이 주된 역할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경우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공적연금 역할을 점차 축소

- 공사연금이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근로소득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충당

II. 노후소득 조달방법에 따른 OECD 국가 분류

<표 2> 노후소득 조달방법에 따른 OECD 국가 분류

	공공이전소득	기업연금	자본소득 (주로 민영연금)	근로소득		공공이전소득	기업연금	자본소득 (주로 민영연금)	근로소득
캐나다	35.1	0.0	42.4	22.5	아일랜드	76.7	0.0	5.5	17.8
뉴질랜드	41.7	0.0	26.8	31.5	오스트리아	81.2	0.0	5.6	13.2
덴마크	46.6	14.5	22.2	16.7	핀란드	81.8	0.0	8.5	9.7
한국	25.0	0.0	22.5	52.5	룩셈부르크	82.6	0.0	9.1	8.3
라트비아	57.1	0.0	1.7	41.3	벨기에	85.0	0.0	6.0	8.9
리투아니아	62.0	0.0	3.2	34.8	프랑스	78.1	0.0	16.0	6.0
에스토니아	64.2	0.0	2.1	33.7	미국	41.3	7.6	15.9	35.3
슬로바키아	67.1	0.0	0.7	32.1	영국	42.6	28.6	11.3	17.5
폴란드	69.8	0.0	0.8	29.4	일본	49.2	0.0	10.6	40.2
슬로베니아	74.8	0.0	4.0	21.3	칠레	18.3	27.2	5.9	48.6
체코	78.1	0.0	2.6	19.3	멕시코	6.1	27.1	11.1	55.8
헝가리	78.7	0.0	1.3	19.9	터키	14.9	37.1	15.9	32.1
그리스	75.8	0.0	5.0	19.1	네덜란드	45.2	39.1	5.8	9.9
포르투갈	77.4	0.0	5.8	16.8	스웨덴	52.4	17.8	12.9	16.9
이탈리아	75.1	0.0	5.9	19.0	스위스	43.2	30.6	11.2	15.0
스페인	71.4	0.0	8.3	20.3	OECD 평균	57.1	8.3	10.0	24.6
독일	70.6	4.8	10.0	14.6					

Ⅲ. 국민연금의 문제점

□ 주요 문제점

- 첫째, 보편성 문제로 넓은 적용(coverage)의 사각지대

* 2020년 12월 기준 18세에서 59세까지의 총인구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26.4%이며, 장기체납자가 103.5만 명이고(국민연금공단 2021a, p.21), 지역가입자 중 거의 절반이 납부예외자(국민연금공단 2021b, p.25)

* 적용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람은 10년 가입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노후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 둘째, 보장성 문제로 소득대체율이 낮고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에 의존해 노후생활을 하기에 연금액이 부족하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퇴직연령(60세) 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 단절 발생

* 이는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

Ⅲ. 국민연금의 문제점

- 둘째, 보장성 문제로 소득대체율이 낮고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에 의존해 노후생활을 하기에 연금액이 부족하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퇴직연령(60세) 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 단절 발생
 - * 이는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
- 셋째, 2022년 4월 기준 적립금이 919.6조원에 달하지만 장기재정 위기에 처해 있음
 - *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에서 2042년 당기 수지적자 발생 후 2057년에 적립금이 고갈되며, 기금 고갈 후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할 때의 필요보험료율이 24.6%이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보건복지부 2018, p.2)
 - * 더욱이 추계에 설정한 인구전망과 거시경제 기초율이 악화되어 추계 시점이 늦을수록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짐
 - * 이는 재원조달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을 의미
- 넷째, 2022년 평균소득의 신규가입자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최소 2.66 이상의 수익비를 기대할 수 있고(<표 2> 참조), 고소득자도 1.24 수준의 수익비 기대
 - * 고소득자의 수익비가 저소득자보다 낮지만 순이전액(총연금액-총보험료) 기준 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많아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음(김상호 2019, p.95).

Ⅲ. 국민연금의 문제점

□ 균형보험료율 산정

- 국민연금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와 이자수입의 합계가 연금지출과 일치하는 수지상등의 원칙 준수 필요

* 신규가입자의 수급 구조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

* 2022년 25세에 가입해 40년 동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하는 남자를 대표가입자로 선정

* 유족연금은 수급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상이한 가입기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30년과 35년 가입한 경우를 추가로 분석

- 균형보험료율은 생애 연금액과 보험료 납부대상이 되는 가입기간별 소득이 주어졌을 때 수지상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율

*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 사용한 이자율과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남성 장래생명표에 기초해 연금수급 기간으로 26년을 설정

Ⅲ. 국민연금의 문제점

- 아래 연산식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40년 가입자의 균형보험료율은 24.0%이며,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소폭 상승(<표 2> 참조)

$$SSB = [(0.125n) - \sum_{j=0}^n 0.00125j](A_t + B_t)(0.05) \times 12$$

$$B_t = \frac{W_{t+z-65} \sum_{j=0}^{64-z} \{ \Pi_{i=0}^j (1 + g_{(t+z-65)+i}) [\Pi_{i=j}^{64-z} (1 + R_{(t+z-65)+i})] \}}{65 - z}$$

$$TSST = W_{t+z-65} \times 12 \sum_{j=0}^{64-z} [\Pi_{i=0}^j (1 + g_{(t+z-65)+i})] \theta_{(t+z-65)+j} (1+r)^{64-z-j}$$

단,

SSB_t : t연도의 노령연금

A_t : t연도 이전 3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_t : 가입기간의 가입자 월 소득 평균액

W_{t+z-65} : 연도의 가입자 월 소득

$(t+z-65)$: 연도 개시연도

t : 가입연도

z : 소득증가율

$R_{(t+z-65)+j}$: 연도의 재평가율

n : 2009년부터 2027년까지 가입연수의 합

$TSST$: 은퇴연도 기준으로 허가화한 총보험료

$\theta_{(t+z-65)+j}$: 연도의 보험료율

Ⅲ. 국민연금의 문제점

<표 2> 현행 국민연금의 수익비(2022년 현가 기준) (단위: 천원)

가입기간	연금액 (A)	보험료 (B)	수익비 (A/B)	순이전액 (A-B)	균형 보험료율
30년 가입	278,222	101,355	2.75	176,867	24.7%
35년 가입	324,969	119,975	2.71	204,994	24.4%
40년 가입	370,088	139,049	2.66	231,039	24.0%

□ 소득수준별 및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 분석 결과 40년 가입한 저소득자(평균소득의 0.2배)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100% 를 상회(<표 3> 참조)

※참고로 평균소득의 0.5배의 저소득자가 수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2년 기준 22.9%임(이는 2022년 A값(2,681,724원) 대비 기초연금액 (307,500원)으로 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하면 82.5%로 산출되어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이와 달리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경우 약 40%의 소득대체율을, 상위 소득자의 경우에는 30%의 소득대체율을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적연금을 더 필요로 하는 그룹은 중위소득과 상위소득 집단

Ⅲ. 국민연금의 문제점

<표 3> 국민연금의 소득수준별 및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단위: %)

	30년 가입	35년 가입	40년 가입
평균소득의 0.2배	89.3	104.1	118.8
평균소득의 0.5배	44.8	52.2	59.6
평균소득의 0.75배	34.9	40.7	46.5
평균소득	30.0	35.0	39.9
평균소득의 1.25배	27.0	31.5	35.9
평균소득의 1.5배	25.0	29.2	33.3
평균소득의 2배	22.5	26.3	30.0

IV. 공적연금 개혁의 세계적 추세

- 1950년대 이후의 경제 호황에 힘입어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 적용대상을 확대 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공적연금이 발전
- * 공적연금 덕분에 근로자는 은퇴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이를 사회의 성취로 인정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발생한 경제성장 둔화, 저출산·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의 도전에 대응해 각국은 공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
-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 축소, 보험료 인상, 수급개시연령 인상 같은 모수개혁을 실시한 국가도 있고, 근본개혁을 통해 NDC제도로 전환한 국가도 있음.
- 공적연금 개혁의 세계적 추세는 노후소득 확보에 있어서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역할을 높이는 것임.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 수준을 낮추고 있음.

IV. 공적연금 개혁의 세계적 추세

□ 독일의 연금 개혁

- 비스마르크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독일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GRV)을 통해 '생활수준 유지' 목표를 추구했지만 1990년대 후반에 경기침체로 재정위기에 직면하자 '연금법 개혁 2001'을 실시
- 국민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사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체계로, 급여 수준보다 재정 안정을 우선시하도록 패러다임 전환
- * 공적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는 대신 민영연금 가입 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공적연금을 보충토록 함
- 또한 독일 제도에 맞게 2001년 NDC의 핵심 요소를 도입해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상황이 변하면 연금이 자동조정 되도록 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
- * 취업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급여산식에 지속가능성 요소(sustainability factor)를 도입해 정치적 개입의 필요성 축소
- ※참고로 일본도 2001년 지속가능성 요소(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했고, 이 규정에 따라 2021년과 2022년에 연금액이 각각 0.1%와 0.4% 감액
- 또한 미래에 적용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상한선(최고보험료율)을 도입하여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 제거

IV. 공적연금 개혁의 세계적 추세

□ 스웨덴,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및 폴란드의 연금 개혁

- 스웨덴은 경제위기로 복지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최저보장연금(Minimum Guarantee Pension)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공적연금을 1998년에 명목확정기여방식(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으로 전환
- NDC에서는 납부한 보험료를 가입자 평균임금 상승률로 재평가(revaluation)해서 개인계정에 기입해 주고, 개인계정에 있는 명목상의 적립금을 은퇴 시점의 개인별 기대여명을 반영해서 연금으로 환산(annuitization)하고, 연금 수급 개시 후에는 인플레이션율과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 인상(indexation)
-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한 결과 정치적 개입의 필요성 감소
-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및 폴란드도 스웨덴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형태의 NDC제도 도입

V.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역할의 조정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에도 38.9%로 여타 국민의 빈곤율보다 월등히 높음.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늦은 도입뿐만 아니라 적용범위와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부족한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을 근로소득에 의존
- 시간이 경과하여 국민연금이 정착해도 적용범위와 보장성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장기재정 불안정으로 국민연금 개혁 불가피
- 결국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는 공적연금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에서 이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함
-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분석은 중상위소득 계층에 사적연금이 더 필요한 것을 보여줌
- OECD 국가에 대한 분석에서도 공적연금의 역할은 축소되고 사적연금의 역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 우리의 과제는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을 어떻게 확대해야 부족한 노후소득을 효율 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지 가입자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

<참고문헌>

국민연금공단, 『2020 국민연금 생생통계 Facts Book』, 국민연금연구원, 2021a, 2021.11.

국민연금공단, 『2020년 제33호 국민연금 통계연보』, 2021b, 2021.7.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60년 국가채무비율 60%대 수준으로 관리」, 보도자료, 2020.9.2.

김상호, 「국민연금 재정불균형과 개혁(안)의 소득재분배 효과: 대표가입자 분석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19, pp.79-104.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2018.

사회보장위원회,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19.7.4. 심의안건.

Esping-Andersen, Gosta and Myles, John (2006), Sustainable and Equitable Retirement in a Life Course Perspective, in The Oxford Handbook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eds. Gordon L. Clark, Alicia H. Munnell and J. Michael Orszag, pp.839-857, Oxford University Press.

European Commission, The 2021 Ag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Institutional Paper 148, May 2021.

OECD (2019), Pension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6d3dcfc-en>.